

01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분석 방법은?

2020 서울9급

- 대안 간의 쌍대 비교를 한다.
- 사티(Saaty)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한다.
-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브레인스토밍 ② 델파이 ③ 회귀분석 ④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해설

· 계층화분석법(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분석적 계층화 과정)은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다음 각 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구성요소)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나 중요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대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이다. 1970년대 초 새티(T. Saaty)가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정부사업의 예비적 타당성 조사에 다기준분석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통합, 다기준(多基準)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 확률(probability) 대신에 우선순위(priority) 사용 등의 특징을 갖는다.

답 ④

02 민츠버그(Mintzberg)의 정부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기계모형 - 정부는 각종 법령과 규칙, 기준에 의해 중앙통제를 받는다.
 ② 네트워크모형 - 정부는 사업 단위들의 협동적 연계망으로 구성된다.
 ③ 성과통제모형 - 정부는 계획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집행 역할은 민영화한다.
 ④ 규범적 통제모형 - 정부는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 통제된다.

해설

일반적인 행정학 책에는 없는 내용이 출제되었음.

- ③ (×) 성과통제모형은 사업부제구조와 유사하며 상부구조가 계획과 통제를 맡고 하부구조는 집행을 담당한다.
 하부구조가 없고 모든 집행업무를 민간이 담당하는 것은 가상정부모형이다.

· Mintzberg 정부관리모형. 5가지 모형 제시. 최고의 정부형태는 없으며 5가지 유형이 함께 작동

정부형태	특징	주요개념
기계 모형	· 정부는 규칙·규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통제하는 하나의 기계 · 관료부패 방지,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해 등장. 1930년대 공공부문의 일반적 모델. Taylor, Gulick, Urwick 공사행정1원론. · 정책의 일관성, 집행의 신뢰성을 제공했으나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유연성·대응성 부족, 개인의 창의성 배제	통제
네트워크 모형	· 기계모형과 반대. 문제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만들어지고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에 의해 연계되는 임시적 네트워크 · 통제 보다 자연스러운 흐름, 철저한 조직문화보다는 상호작용, 느슨한 연계 강조 · 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높지만 통제를 배제하여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강함.	연계 의사소통 협력
성과통제 모형	· 정부를 기업처럼 만들 예 신공공관리론 · 분할-할당-측정 : 정부조직 전체는 사업부서들로 분할,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 수행목표가 부여되며, 사업부서의 관리자들은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짐(사업부제 조직과 유사). 궁극적 효과는 기계모형의 강화(집권화를 위한 분권화) · 상부구조는 계획과 통제를, 하부구조는 집행을 담당.	(조직)분할[특화] (사업)할당[위임] (성과)측정
가상정부 모형	· 무정부가 최선의 정부. 모든 정부활동은 민간영역에서 이뤄짐(하부구조는 없고 집행업무는 민간이 담당). · 정부는 단순히 민간영역을 어떤 사업에 배치할 것인지 조정 역할만 담당(상부구조는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주선만 담당)	민영화 계약·협상
규범적 통제 모형	· 구조·제도보다 정신과 태도를 중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한 규범적 통제 · 5가지 요소(핵심은 헌신) ① 선택 : 능력보다 가치관·태도에 의한 선택 ④ 사회화 : 사회체계에 헌신하게 함 ② 지도 : 수용된 원칙과 비전에 의한 지도 ⑤ 책임 : 모든 구성원이 책임 공유 ③ 판단 : 서비스 경험자, 수혜자, 전문가에 의한 판단	헌신 선택 사회화 판단

답 ③

0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20 서울9급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 ① 고객만족도 ② 행정서비스헌장 ③ 민원서비스 ④ 행정의 투명성 강화

해설

- 행정서비스현장의 기본 구성요소 : ㉠ 행정서비스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절차,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행정서비스현장규정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현장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②

04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시9급

-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 ②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등은 제외
 -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 (○) 전대차관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 원칙)의 예외
 - 제53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 목적예비비의 경우 공무원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
 -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④ (×) 150일 → 120일
 -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05 베버(Max Weber)가 관료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0 서울시9급

- ① 문서화된 규정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이 기록된 규정이 존재함
- ② 계층제 -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됨
- ③ 전문성 -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에의 전념을 요구함
- ④ 협력적 행동 - 원활한 계층 체계 작동을 위해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높은 효율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해설

- ④ (×) 관료제는 엄격한 분업을 특징으로 한다.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라, 자기가 맡은 분야의 유능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해 분업화된 직무를 맡긴다. 사람의 전문화와 일의 전문화(분업)는 업무의 능률성을 높인다.

답 ④

0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시9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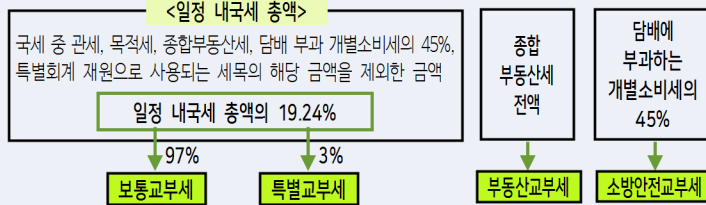
- ①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도로 운영되고 있다.
- ② 대표적 지방세로,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 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 ③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④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해설

- ②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며 지방교부세 재원은 일정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부과 개별소비세 45%로 구성.
 - * 위 재원 중 '일정 내국세액 총액의 19.24%'를 일반 수험생들이 단순히 '내국세액 총액의 19.24%'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표현해 주어야 한다. 모든 내국세 총액 중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④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종전 담배부과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증가. 소방교부세 용도에도 '소방인력 운용 추가'. 증가된 재원(담배개별소비세의 25%)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충당.

• **동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답 ②

0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유형 중 내용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서울9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15명과 이들에게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① 윤리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사회적 규제정책

해설

소비자의 건강·안전에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규제정책에도 해당한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유형 분류에는 사회적 규제정책이 없으므로 ③이 정답.

• **보호적 규제정책**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여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예 식품·의약품 사전허가제, 근로기준설정, 최저임금제,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공에게 해로운 활동 및 조건은 금지되고 이로온 활동은 요구됨. 규제정책 중 대부분을 차지.

답 ③

08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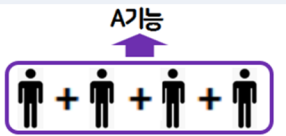
2020 서울9급

- ① 동등잠재성(equipotentiality)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란다우(Martin Landau)는 권력분립, 계선과 참모, 양원제와 위원회제도를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제도로 본다.
- ③ 창조성 제고, 적응성 증진 등에 효용이 있다.
- ④ 한계로는 비용상의 문제와 조직 내 갈등 유발 등이 지적된다.

해설

- ① (×) 가외성의 의미 중 반복성(중복성 : duplication)에 대한 설명이다.

◆ 가외성의 의미

중첩성 overlapping	반복성(중복성) duplication	동등잠재력(등전위현상) equipotentiality
어떤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들이 중복적·상호의존적으로 수행(공동관리)	동일한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	주된 기관의 작동 불능시 타 기관이 대행
 A기능	 A기능 A기능 A기능 A기능	 A기능
예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본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소방기관 등이 협력하여 처리, 위원회	예 동일 기능을 하는 민원창구 중복 설치	예 병원·실험실의 자가발전시설 직무대리·권한대행

답 ①

0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좁게 해석한다.
- ④ 논변적 접근방법은 결정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

해설

- ③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특정 속성을 획득한 것으로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회 질서나 패턴으로 본다. 제도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지만, 의식적 설계의 산물은 아닌 문화·상징·의미체계 등을 뜻한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정의**하여 공식적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 도덕적 틀, 사회문화까지를 포함시켜 제도와 문화 사이의 개념적 구분을 와해시켜 문화 자체를 제도로 정의한다
- ④ (○) 논변적 접근방법은 자연현상의 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과는 달리 행정현상과 같은 가치측면의 규범성을 연구할 때는 결정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에서 진정한 가치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고 본다. 공청회는 논변적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정책논변적 접근은 경험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통합함으로써 합리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어떠한 결정에서나 결정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당사자들이 나타나고 결정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대안은 지지·옹호하지만, 불이익을 가져올 대안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이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참여자는 상대방을 주장을 반박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야 한다. 논변이란 이와 같이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논변은 법정에서의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시하여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호소하는 변론에 비유될 수 있다. Toulmin(1958)은 법정변론 비유를 이용하여 논변구조의 모형을 소개한다. 즉, 논변에 있어 정보·자료(data)는 본증(本證: warrant), 보증(保證: backing), 반증(rebuttal)이라는 일련의 증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 내지 자신의 확신정도가 서로 다른 한정적(qualifier) 주장(claim)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정책자료·정보, 본증, 보증, 반증, 한정접속사, 반증, 정책주장 여섯 요소로 구성되는 논변구조는 법적 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간략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답 ③

10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2020 서울9급

- ① 감사원사무총장
- ② 법원행정처장
- ③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④ 국회사무총장

해설

- ① (×)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답 ①

11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데이터 활용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공개대상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
|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 ② (○) **기관별 기본계획**: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장에게 제출
전자정부기본계획: 5년마다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이 수립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

제2조(정의)

- 1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 전자정부법 규정상 정확하게는 '데이터 활용' 신청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이며 법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공동이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답 ④

12 정책결정의 장(또는 정책하위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주장하는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다원주의 -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② 조합주의 - 정부는 이익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③ 엘리트주의 -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 ④ 철의 삼각-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3자가 강철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후호적인 삼각관계의 역할을 형성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 ④ (×) 철의 삼각(Iron Triangle) : 각 정책영역별로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관료조직, 고위관료)**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한 장기적·안정적·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통해 상당한 독점성을 지닌 하위정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답 ④

13 다음 내용 중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서울9급

- ㉠ 변혁적 리더십 : 리더는 부하들에게 영감적 동기를 부여하고 지적 자극 등을 제공하며 조직을 이끈다.
- ㉡ 거래적 리더십 : 리더는 부하의 과업을 정확히 이해 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 ㉢ 셀프 리더십 : 리더는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섬기는 데 중점을 둔다.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 **셀프리더십** :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리드하는 것을 의미함. 기존의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구성원은 리더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만, 셀프리더십에서 구성원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자기이해, 자기통제능력, 자기주도능력, 자신감).
- **서번트리더십** :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부하간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조직 목표 달성에 부하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들.

답 ③

14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0 서울9급

- ① 자원 배분 기능
- ② 소득 분배의 공평화 기능
- ③ 경제 안정 기능
- ④ 행정관리적 기능

해설

■ 예산의 경제적 기능(R. Musgrave)

재정의 3대 기능을 배분기능, 재분배기능, 경제의 안정과 성장촉진 기능으로 분류.

- ① 자원배분기능 : 재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서비스의 사회적 최적 생산과 최적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경제적 시장실패의 교정-효율적 자원배분).
- ② 소득재분배기능 : 정부가 재정 또는 예산을 통해 소득분배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기능(사회적 시장실패의 교정-소득분배의 형평성 확보). 예) 세출면-사회보장지출, 세입면-누진소득세.
- ③ 경기안정화기능(거시적 국가경제 관리)
- ④ 경제안정기능 : 재정정책의 도구로서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켜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함(불황시 정부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하고, 인플레이션 기에는 지출을 줄여 과도한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킴).
- ⑤ 경제성장기능 :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한 경제발전·성장 기능(주로 개발도상국, 자본형성).

답 ④

15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20 서울9급

- ㉠ 집단 동조성과 제한된 결속력은 외부인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
- ㉡ 공익이나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① ㉠ 사회자본론, ㉡ 신공공서비스론
- ② ㉠ 사회자본론, ㉡ 신공공관리론
- ③ ㉠ 뉴거버넌스론, ㉡ 신공공서비스론
- ④ ㉠ 뉴거버넌스론, ㉡ 신공공관리론

해설

- ㉠ 사회자본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자본의 지나친 동조성(同調性; conformity)의 요구는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한 집단의 강한 결속과 신뢰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척, 폐쇄성 등 부정적 효과를 갖게 한다.
- ㉡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제시하는 정부나 행정관료의 역할로서 '봉사(public service)'를 의미한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답 ①

16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과학적 관리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경제 상황의 산물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 ② 행태주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 ③ 체제이론은 체제의 부분적인 특성이나 구체적인 행태 측면에 관심을 갖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 ④ 신행정론은 규범성, 문제지향성, 처방성을 강조한다.

해설

- ③ (×) 체제이론은 체제와 환경작용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지나치게 거시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체제의 전체적 국면은 잘 설명하나, 체제의 구체적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은 설명 곤란하다(미시적·행태적 측면 경시).

답 ③

17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피들러(Fiedler)는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 과업 구조, 부하의 특성을 들었다.
-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리더십 격자 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과업(생산)의 두 차원으로 나눈다.
- ③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리더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소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 ④ 아이오와(Iowa)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해설

- ① (×)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한 리더십 상황의 유리성 결정변수
- ㉠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 리더와 부하의 관계-상호 신뢰감
- ㉡ 과업구조(task structure) : 과업의 명확성, 구체성, 예측가능성
- ㉢ 지위권력(position power) : 지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력

답 ①

18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설

• 정부조직법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답 ②

19 예산제도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서울9급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로,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목표달성 차원에서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지나친 집권화와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 ① 성과예산제도
- ② 계획예산제도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
- ④ 영기준 예산제도

해설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

P P B S

문제내기 싫었나보군요.

답 ②

20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 ② 단체위임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 ④ 단체위임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 보건소의 운영 등이있고,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 사무, 선거 사무 등이 있다.

해설

③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구 분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의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 존립과 관련된 본래적 사무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별 법령에 의해 위임한 사무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포괄적 법령 근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한 사무
사무성질	지방적 이해를 갖는 사무	지방적 + 전국적 이해관계	전국적 이해관계
사무처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일선기관의 지위)
결정주체	지방의회	지방의회	국가(집행기관에 위임)
지방의회의 관여	가능	가능	불가능(단, 경비 부담시 관여 가능)
자치입법	조례, 규칙	조례, 규칙	규칙(조례 불가)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국가보조금은 장려적 보조금	위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국고보조금은 부담금(일정 비율 분담)	전액 위임기관이 부담 국고보조금은 교부금(전액 부담)
배상책임	지방 책임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국가의 감독	합법성 통제 사후·교정적 감독	합법성 + 합목적성 통제 사후·교정적 감독	합법성 + 합목적성 통제 사후·교정적 + 사전·예방적 감독
예	지역소방, 상하수도, 오물처리 및 청소, 시장·병원·공원·도서관·운동장 설치, 초등학교 교육, 학교급식, 도시계획, 도서관, 지방세 부과·징수 등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 징수, 시·도의 국제징수, 도의 국도 유지·수선, 광역자치단체의 하천 보수·유지, 국유하천 점유료 및 사용료 징수, 국민 기초생활보장사무, 전염병예방접종, 재해구호 등	경찰, 징병,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경제통계, 농업개발, 상공업 및 수산업 진흥업무, 공유수면 매립면허, 지적, 국제조사

답 ③